

2014

연구보고서-14

I S S U E P A P E R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현황과 고용·복지 정책

수행과제명 ·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과제책임자 · 김종숙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현황과 고용-복지 정책*

수행 과제명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과제책임자  김종숙 연구위원

 Tel: 02-3156-7135

 e-mail: jskim@kwdimail.re.kr

요약

근로연령대의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정책이 필요함. 특히 이들의 세대와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에 차이가 있어 세분화된 정책발굴이 필요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종숙·배호중(2014).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과거 사별 후 노인기에 집중되던 1인 가구는 전 세대로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가구 경제상태와 고용상태는 2인 이상 가구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지금까지 고령층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향후에는 65세 미만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1인 가구 중 노인기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비교적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근로연령대의 1인 가구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근로연령대에서는 특히 성별 특성의 차이가 커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대응이 필요함.
-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가구는 경제적 행위의 단위이므로 개인과 다른 개념적 접근이 필요함. 특정 가구에 속한 개인과 1인 가구의 개인은 경제적 행위와 필요성에서 다를 수밖에 없음. 일례로 2인 이상 가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만 1인 가구는 이와 달라, 소비구조나 소득구조에서 2인 이상 가구와 매우 다른 경제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성별로 개인의 경제활동과 가구경제의 구조적 측면이 상이함. 소득구조와 지출구조가 다르고 필요성과 요구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이 필요함. 이에 따라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청장년기의 고용불안 현황과 이들의 경제적 안정성 및 취약성을 연계해서 파악함으로써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복지-고용정책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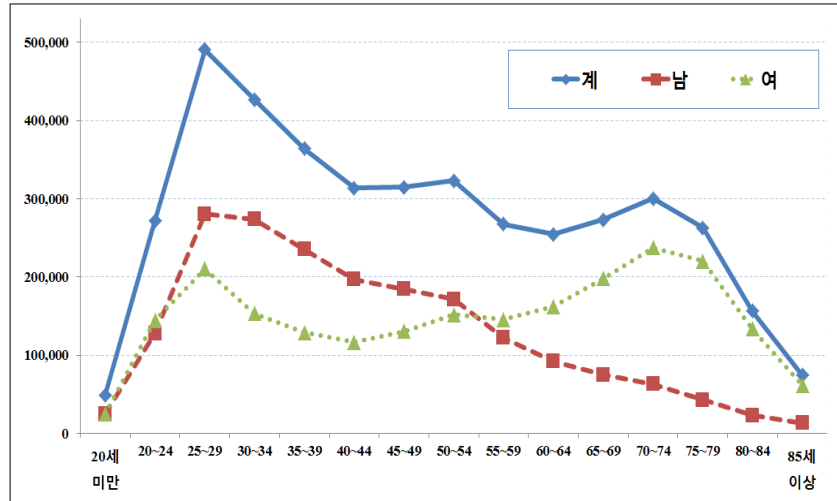
-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에게 요구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특성별로 효율적인 정책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2 조사 및 분석결과

가.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분포

- 통계청에서 발표한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가장 많은 1인 가구 분포를 보이는 집단은 청년기이며, 이어서 75세 이후 1인 가구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임. 남성 1인 가구는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것과 달리 여성은 70세 이후에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띠며. 흥미로운 것은 남성은 약 55세를 기점으로 1인 가구수 감소폭이 커지는데 반하여 여성 1인 가구는 이 연령대를 거치며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임. 결과적으로 50대 후반부터 초기 노인기에 여성 1인 가구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고령 1인 가구의 증가는 이 시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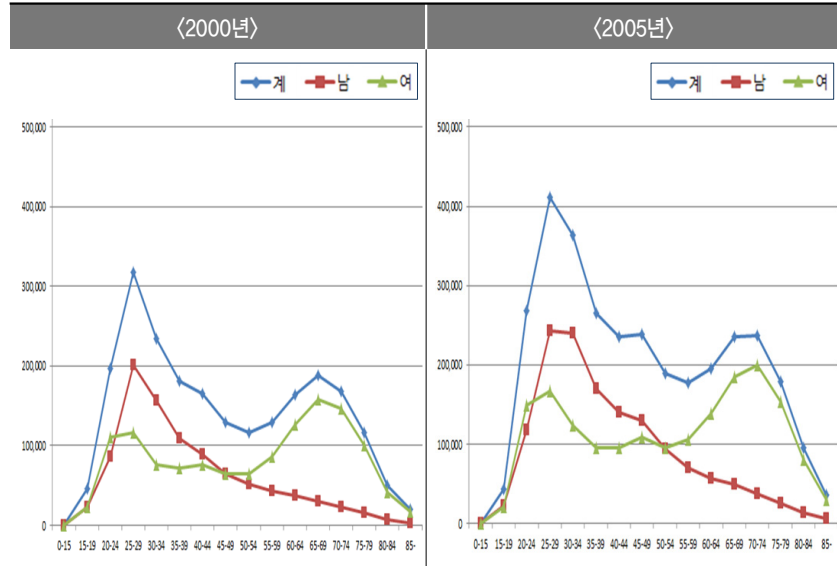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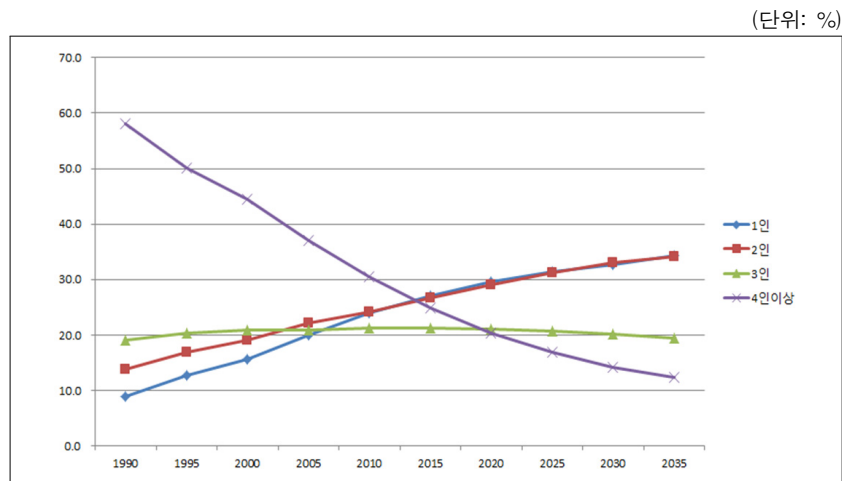
[그림 1] 세대별, 성별 1인 가구 수(2010년)

(단위: 가구)



[그림 2] 세대별, 성별 1인 가구 수(2000년, 2005년)

- 1인 가구의 분포는 구성과 규모에서 큰 변화를 거쳐 옴. 2000년에는 15~29세 1인 가구 규모가 560,776가구에서 2005년에는 723,255가구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노년가구의 규모 역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
 - 이중에서도 여성 1인 가구 규모의 증가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 1인 가구의 추이가 역전되는 시기 역시 2000년에는 40대 후반이었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후행하는 모습을 보임.
- 우리사회는 현재 4인가구와 1~2인 가구의 비중이 전환되는 전환점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 각 부문에서 이러한 가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알 수 있게 함.
 - 1990년도에 9.0%에 불과하던 1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23.9%가 되었고 2020년 이후에는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게 될 것임.
 -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모든 제도와 정책들, 사회환경 등을 1~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시점인 것임.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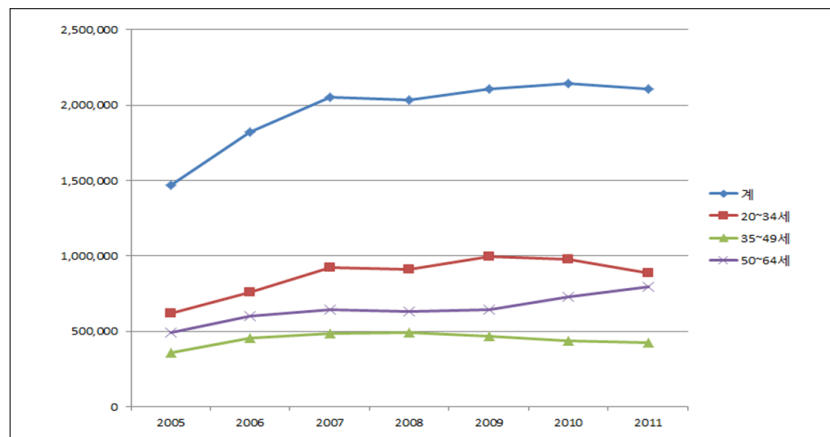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p

[그림 3] 1인 가구의 비중변화와 예측

나. 근로연령대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구성 변화

-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미만인 근로연령대 가구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11,915,332가구 중 1인 가구는 2,203,273가구로 근로연령대 가구의 18.49%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남¹⁾.
- 근로연령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대상들에게 복지와 고용정책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 근로연령대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대별로 3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중년기의 일정한 수준 유지, 장년기의 증가가 두드러짐. 그로 인하여 전체 1인 가구에서의 구성상 변화가 나타나는데 근로연령대 1인 가구 중 장년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료: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2011년 추가표본(1,800가구)을 제외한 결과임.

[그림 4] 세대별 1인 가구의 규모와 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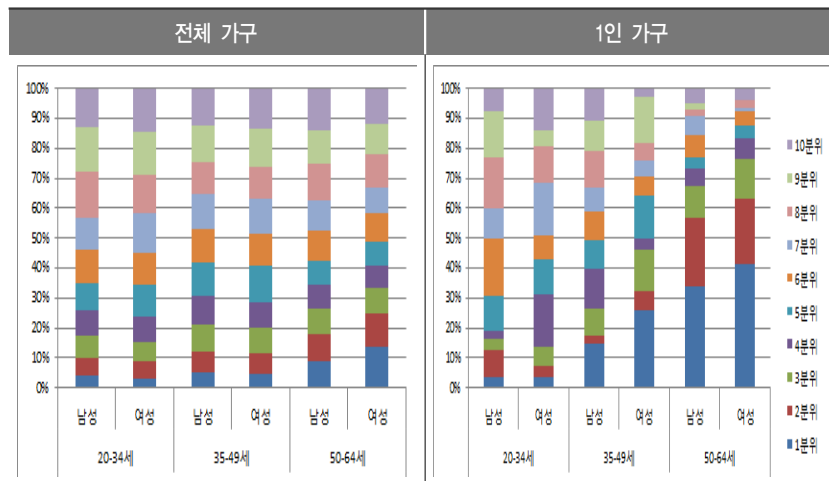
- 1)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서울대학교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하고 발표하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1차년도(2005년)~8차년도(2012년) 원자료임. 「한국복지패널」은 종단 및 횡단 연구가 가능하며, 저소득층 과대 표집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1인 가구 수가 많이 확보되어 분석상에 유리한 점이 있음.

- 이러한 변화들을 볼 때 장년기의 1인 가구가 규모나 구성면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1인 가구 정책이 장년기에게 보다 집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장년기는 노후로의 진입 전단계로 이들의 경제적 상태는 노후 빈곤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됨. 장년기에 1인 가구라는 점은 부양하거나 부양받을 수 있는 타 가구 구성원이 부재한 상태로, 특히 여성 1인 가구 규모가 남성을 역전하는 시기이기도 함.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상당수가 혼자 사는 여성노인임을 고려할 때 50대에 1인 가구로 진입하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필요함.
- 청년기의 경우 전 생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생애사건에서 중요한 사건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혼인, 임신, 출산 등이 집중되는 시기여서 1인 가구로의 유입과 유출이 상당히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보임. 특히 성별로 생애경험 자체가 매우 다른 연령대가 청년기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김중숙 외(2012)에서는 청년기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1인 가구의 증가임을 제시함. 동시에 이들은 생계의 압박으로 인하여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보다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특성이 있는 집단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이후 상태의존성이 커서 한번 가진 고용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가능성을 높이므로 계층 간 이동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됨. 고용지위가 좋지 않은 청년기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연구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다. 분석결과 나타난 1인 가구의 특성

- 본 연구의 분석결과 1인 가구는 전체적으로 2인 이상 가구와 구분되는 특징들이 나타나며 1인 가구의 내부에서도 세대별로 성별로 상이한 고용 및 경제적 현황을 보임.

-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소득 및 자산수준이 낮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특징을 나타냄. 이는 최근 신규로 유입되는 1인 가구에서 두드러져 향후 1인 가구의 증가는 빈곤층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임. 최근 유입되는 청년층은 고용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편이며 이전소득 규모가 커서 과거에 비하여 부모세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집단의 유입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유입되는 장년기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남녀 모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1인 가구의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것으로 보임.



[그림 5]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

- 고용 역시 매우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년기 1인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비취업한 집단의 비중은 남성 40.0%, 여성 45.9%로 심각한 수준임. 근로능력있는 비취업자 집단이 1인 가구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소득 수준 등이 취약하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들이 빈곤층으로 편입됐거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중년기 여성 1인 가구는 자산 보유가 열악하며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는 여성의 생애사건을 거치면서 돌봄 부담과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경제적 역량 및 지위의 취약성 분명하게 드러남. 이들은 고용상태 면에서도 구직활동 참여가 매우 낮으며 정부의 일자리사업 등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이 보호된 일자리로 편입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중년기에 강화된 고용지원을 통하여 이 시기의 소득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청년기에는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간 격차와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음. 청년기에 나타나는 1인 가구의 특징은 소득수준의 편차가 매우 커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수준의 1인 가구와 상당히 취약한 1인 가구가 공존한다는 점임.

- 1인 가구의 규모와 구성을 볼 때 향후 점차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기 1인 가구의 증가, 빈곤층 중장년기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이어져 빈곤가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이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난 특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세대의 빈곤과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질 것임. 장기적으로 청년기 1인 가구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고용의 측면에서 청년기에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원에 비하여 취업자 비중도 높고 상용직 비중도 높은 모습을 보임. 그러나 중년기·장년기를 거치면서 1인 가구의 고용은 급속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비취업한 집단의 규모와 비중이 매우 커서 이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은 남성에 비하여 높음. 여성 1인 가구들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낮고,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은 매우 중요함.
- 인적자본 측면에서 여성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고학력 집단의 근로능력있는 비취업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조치들이 정책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여성 1인 가구는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했을 때의 소득증가가 뚜렷하고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상태로 전환했을 때 소득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취업상태에 따른 변동성 면에서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여성 1인 가구의 취업지원 정책은 소득향상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은 특히 중요함.

〈표 1〉 취업/비취업 이행집단의 균등화 소득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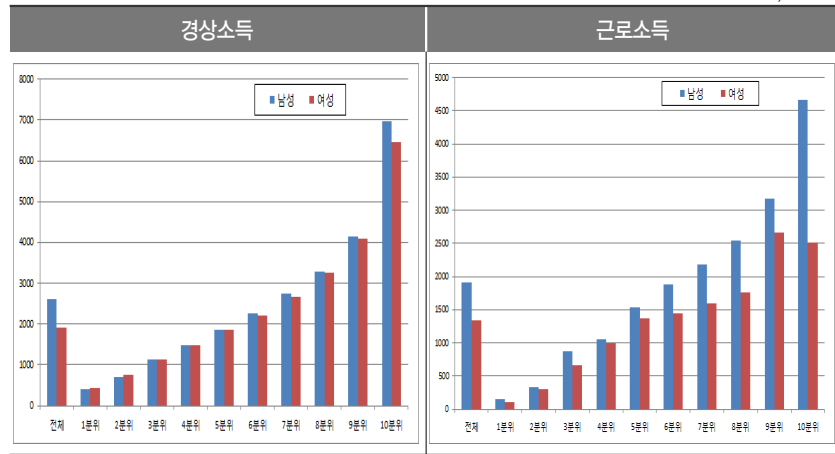
| 변수명 | | 취업→비취업 | | | 비취업→취업 | | |
|----------------------------------|--------------|---------|-------|--------|---------|-------|--------|
| | | β | t | p > t | β | t | p > t |
| 기준년도 취업상태 (상용직 임금근로 기준) | 임시직 임금근로자 | 0.0053 | 0.16 | 0.872 | -0.0064 | -0.27 | 0.791 |
| | 일용직 임금근로자 | 0.0058 | 0.15 | 0.883 | -0.0232 | -0.70 | 0.484 |
| | 고용주 | -0.3762 | -5.07 | 0.000 | -0.0284 | -0.31 | 0.755 |
| | 자영업자 | 0.0251 | 0.48 | 0.630 | -0.1613 | -3.72 | 0.000 |
| 성별(남=1, 여=0) | | -0.0196 | -0.65 | 0.513 | 0.0053 | 0.24 | 0.811 |
| 교육수준 (고졸 기준) | 무학 | -0.0105 | -0.08 | 0.936 | 0.0496 | 0.38 | 0.708 |
| | 초등학교 | -0.0169 | -0.27 | 0.789 | 0.0111 | 0.19 | 0.848 |
| | 중학교 | 0.0066 | 0.12 | 0.907 | 0.0189 | 0.45 | 0.653 |
| | 전문대 | 0.0126 | 0.32 | 0.746 | -0.0799 | -2.67 | 0.008 |
| | 대학교 이상 | -0.0578 | -1.61 | 0.109 | 0.0164 | 0.61 | 0.545 |

| 변수명 | 취업→비취업 | | | 비취업→취업 | | |
|------------------------------|---------|-------|--------|---------|-------|--------|
| | β | t | p > t | β | t | p > t |
| 가구구분 (1인 가구=1, 2인 이상가구=0) | -0.0065 | -0.10 | 0.921 | -0.4182 | -5.67 | 0.000 |
| 성별×가구구분 (여성=1)×(1인 가구=1) | -0.0256 | -0.21 | 0.830 | 0.4191 | 4.18 | 0.000 |
| 연령 | -0.0073 | -0.76 | 0.447 | -0.0074 | -1.07 | 0.284 |
| 연령제곱(=연령×연령) | 0.0000 | 0.83 | 0.404 | 0.0001 | 0.83 | 0.406 |
| 상수항 | 10.0655 | 53.41 | 0.000 | 9.2732 | 69.82 | 0.000 |
| 관측치수 | 645 | | | 883 | | |
| Adj R^2 | 0.0305 | | | 0.0535 | | |

자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분석.

- 근로연령대 1인가구의 소득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상소득은 근로연령대 1인 가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 성별 차이가 두드러짐.
- 근로소득의 성별차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1,2분위와 더불어 3분위 여성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인 6,640,248원(2012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5분위 이후에서는 근로소득 성별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만원, 연간)



[그림 6] 근로연령대 1인 가구의 경상소득과 근로소득

라. 가구단위 정책 현황과 1인 가구

1) 고용-복지 정책과 1인 가구

- 고용-복지 연계의 핵심 목표는 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고용복지 정책에서 현재는 가구와 개인의 애로가 중복되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인 가구의 원인과 현상이 다양하며 개인이면서 가구라는 점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복지수요 등에서 우선순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이 주된 사유일 것임.
- 근로연령대 개인의 경우 고용정책이 제공되어, 가구의 복지수요가 부양가족에 비해 시급성면에서 낮을 수도 있기 때문임. 향후 1인 가구의 증가가 본격화되고 이들에 대한 정책수요가 확대될 경우 보다 본격적인 고려도 가능할 것임.
- 1인 가구는 본인의 취업상태 변화나 근로소득 변화에 따라 경제적 지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빈곤을 중심으로 역동성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는 고용서비스는 가구의 경제적 변동성을 고려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음.

2) 주거, 재정 및 금융지원 정책과 1인 가구

● 1인 가구의 주거지원 필요성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분석결과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은 전체 소비지출의 16.6%를 차지하며 비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에 비하여 매우 높음. 더불어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주거비는 그 보다 많은 수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에서의 주거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됨.
-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주택공급제도에서도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 가점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세대주 나이가 많고,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이며, 미성년자녀 수와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는 높은 가점을 받음. 이러한 제도들은 원천적으로 1인 가구의 정책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주거를 위한 금융제도인 주거자금 대출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고려는 부족함. 1인 가구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제도’, ‘저소득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되고 있어 청년기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또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일반전세자금 대출도 자격기준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명시함으로써 1인 가구의 수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현행 조세 및 사회보험에서도 가구원에 따른 대상자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정책 수혜에서 차이가 있어 중장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상당기간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음.

-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해서도 3인 가구 기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건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마. 시사점

- 1인 가구의 증가는 인구학적인 변화로 그 자체로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성을 제기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변화가 사회, 경제 각 부문에 새로운 현상과 문제점을 가져오며 기존의 정책 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우리사회는 4인 가구 중심의 사회정책 모델을 상당기간 유지해오고 있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정책의 기준들이 더 이상 다수의 정책대상자를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의 지원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여러 영역의 정책들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1인 가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근로계층 1인 가구의 고용과 경제적 상태 간 연결고리를 찾는 것임.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경제적 충격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결과에서도 1인 가구의 취약성은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음.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경제적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최근 신규로 유입되는 1인 가구 중 장년기 남성은 빈곤계층의 유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 중 대다수는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임. 결국 1인 가구의 증가는 비취업으로 인한 빈곤유입 가능성이 큰 계층의 증가라는 흐름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따라서 소득지원, 고용지원, 주거 및 금융 등 각각의 정책영역에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정책의 대상과 방법에서 1인 가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큰 정책의 방향이 될 것임.

3 정책제언

제안1)

-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 본 연구 결과는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 1인 가구의 특성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데 한계를 지님. 가장 큰 한계는 표본의 부족임.
 - 이러한 문제점은 제한된 자료 표집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설문 등에 기인함. 향후 1인 가구의 연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표집과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제안2)

-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
 - 현재까지 사용하는 균등화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함. 1인 가구가 갖는 이질성을 볼 때 가구 균등화 지수를 이용한 2인 이상 가구와의 비교는 1인 가구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물론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균등화 방식에 따른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향후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을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태 분석을 위해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제안3)

● 고용-복지의 연계에서의 1인 가구 인지성 제고

▶ 정책집행 시 1인 가구 여부의 인지

- 빈곤층의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특히 비취업 집단의 활성화 전략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고용지원에서는 가구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만, 특히 부양해야 할 가족구성원이 없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은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충분히 고려되고 지원되어야 하므로 고용지원에 있어서 1인 가구 여부를 인지할 필요가 있음.

▶ 1인 가구의 우선순위 부여

- 상당수 1인 가구는 저소득 계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예방적 조치들이 강화되어야 함.
- 취업한 집단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직업훈련 등 숙련수준의 향상, 비취업한 집단에게는 효과적인 취업알선, 근로의사가 없는 집단에게는 근로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데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에서는 1인 가구가 주된 고려요인이 아님.
- 1인 가구의 근로소득 강화는 향후 빈곤예방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니 만큼 특히 장년층과 중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서 정책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에 1인 가구를 산입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4)

● 여성 1인 가구 고용-복지 지원

-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이 남성에 비하여 높고 여성 1인 가구는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소득민감도가 크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여성들이 돌봄의 의무가 있거나 하는 상황적 요인들로 알려져 있으나 분석결과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근로능력자들도 취업의사가 낮고 구직활동에 소극적이었음.
- 중년기와 장년기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이혼 및 사별로 1인 가구가 되는 여성의 비중이 높아 1인 가구이지만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는 돌봄지원이나 일·가정양립 정책, 적극적 활성화 정책이 모두 중요하게 제공되어야 함. 돌봄 지원 정책에서 이러한 가구 상황의 변화들을 보다 민감하게 인지하여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임.
- 여성 1인 가구를 정책대상자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초기 상담이나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등 여성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 대한 활성화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에 여성 1인 가구를 추가하여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제안5)

● 장년기 남성 1인 가구 지원 강화

- 분석결과 장년기 남성 1인 가구의 취약성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 특성에 비추어 저소득 남성 1인 가구는 고용 및 생활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일 것으로 보임. 이들은 근로

의욕이 낮은 집단이 많아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실업급여나 훈련급여 등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이러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통한 사례관리의 강화가 필요함. 이들의 생활지원,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이들이 고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모색해야 할 것임.

제안6)

● 청년기 1인 가구 고용안정 지원

- 청년기 1인 가구의 고용상황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규 유입 1인 가구의 임시직 비중이 기존의 1인 가구나 전체 가구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최근 1인 가구로 유입되는 청년층 1인 가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청년 대상 정책에서도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1인 가구원들은 비1인 가구원에 비하여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이들은 노동시장 이행기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지원 정책이 동시에 필요한 계층임.
- 조기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도’에 1인 가구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각급 학교나 취업포탈, 고용센터 등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그 외에도 각 부처의 청년대상 훈련 및 지원 사업 등에서도 1인 가구 남녀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별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안7)

● 1인 가구의 주거 지원

▶ 주거의 성별 차이 반영

- 분석결과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은 비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에 비하여 매우 높았으며 특히 청년기 여성의 경우 안전 등 기타 이슈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주거 급여에 있어서 성별 특성에 대한 반영이 1인 가구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여성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고 실제로 안전에 대한 위험도 및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여성들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거 정책에 반영해야 함. 공공임대 등 기존의 1인 가구 주거 지원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주거급여 등 지원정책 산정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1인 가구 밀집 지역 지도를 지자체별로 작성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초기 청년기 1인 가구의 주거 금융지원

- 주거정책에 있어 각종 자금대출 등에서는 1인 가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만 3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는 이들 자금을 활용할 수 없음.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들은 부족한 상황임. 청년기의 특성과 성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임대주택 정책과 대출제도 등 금융지원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인구학적, 사회학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의 경제적 활동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음.
- 본 연구는 가장 요구가 높은 경제적 안정성과 고용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1인 가구의 상세한 현황을 분석하고 각종 경제행위의 결정요인과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한 분석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가구연구에서 취약한 성별 관련성을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 연구의 성별 관련성을 부각시켜, 향후 1인 가구 연구에 있어 젠더를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임.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